

(2) 金融改革法案의 推進과 波及 效果

- (現況) 재경원의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일괄 통과되지 않고 繫留됨
- (主要 內容) 금융개혁법안에는 핵심 쟁점 법안인 中央銀行制度和 監督體制와 관련된 안과 銀行·證券·綜金社 改正法 등의 개별 사안이 있음
- (波及 效果)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金融 産業의 構造 變化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
- (補完 課題) 금융개혁에 따른 3大 障礙 要因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銀行 所有限度規制의 緩和, 金融持株會社의 早期 導入, 金融 機關의 進入規制 緩和 등의 추가 보완 사항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

재경원이 제출한 13개 금융 개혁법안 중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

- (現況) 지난 11월 18일 휴회된 정기 국회는 재경원이 제출한 13개 금융개혁법안 중 4개(證券去來法, 保險業法, 預金者保護法, 相互信用金庫法)를 제외한 9개 법안을 미처리하여 계류시켰음
 - 재경원은 금융시장 안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내 일괄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음
 - 외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외환 위기,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임
 - 또한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관리, 감독을 위해 감독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함

중앙은행제도 개편, 금융감독체제 개편,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강화 등

- (金融改革法案의 主要 內容) 금융개혁의 추진 목표는 건전성 기반의 확립,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 제고, 금융감독체계의 통합과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
 - (한국은행법)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금통위 의장이 중앙은행 총재를 겸임
 - (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) 재경원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은행·증권·보험 및 기타 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 담당
 - (예금자보호기구의 기능 강화) 예금보험공사, 증권감독

- 원, 보험감독원, 신용관리기금으로 다기화돼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 기능을 강화함
- 이외에 기업 집단의 결합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음

<13個 金融改革改正案 主要 內容>

법 안	주요 내용	
중앙은행법 개정	- 한국중앙은행법으로 개정 - 금통위 의장 겸직 - 금융감독에 관하여 자료제출 요구권	
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제정	-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- 금감위의 사무국 설치 - 금감위에 증권선물 위원회 설치 - 은감원, 증감원, 보감원, 신용관리기금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- 각 감독원의 특수성을 일정 기간 인정	
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따른 관련 사항	- 은행법, 증권 거래법, 보험업법,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, 선물 거래법, 신탁업법, 상호신용금고법 등과 관련된 감독 체제의 개정 - 이외에 예금자 보호법, 기업집단 결합 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등과 관련된 감독체제의 개정	
개 별 사 안	증권거래법 개정안*	- 증권사의 부채 비율에 대한 제한, 폐지
	은행업법 개정안	-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조성을 통한 주주대표 경영참여 강화 - 지점 설치,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 폐지
	예금자보호법 개정안*	-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-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전담금융기관인 가교은행 설립 가능
	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	- 대주주 계열여신 및 계열기업군 여신 한도 등을 법률에서 규정 - 「단기금융업법」 폐지
	보험업법 개정안*	- 보험계약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 기반 마련
	상호신용 금고법개정안*	- 금고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「10%」 이내 → 「20%」로 상향 조정 - 금고의 업무영역 확대
	기업집단 결합 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	-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
	폐지법률안	- 단기금융업법, 신용관리기금법 폐지
절차법 형식으로 개정할 법률안	- 36개 법률에 대해서 절차법으로 개정	

주 : '*' 표시된 법률의 개정안은 국회 통과됨

금융기관간 M&A가
촉진되어 금융산업
의 구조 변화 가속
화

- (豫想 波及 效果)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은행·종금업계는 M&A 촉진의 토대가 마련되어 향후 구조 조정과 대형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은행의 소유구조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 주도의 M&A가 불가피할 전망이다
 - 분산되어 있던 예금보험기구가 예금보험공사로 통합되어 예금자 보호 기능이 강화되고,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어 부실금융기관 인수가 용이해질 것임
 -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은 각 금융기관의 겸업화 진전을 크게 촉진시켜 국내 금융산업의 유니버설 banking 체제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임
 - 금리 자유화, 수수료 자유화 등으로 금융산업의 기존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 구조로 변모
 - 전면적인 금리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은행권의 경쟁 심화로 요구불 예금 및 단기 저축성 예금의 금리가 인상되어 예대 마진은 감소할 것임
 - 금리의 완전자유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금리 위험 관리 체계도 심한 변화를 겪게 될 전망

국회에서 미처리된
9개 금융개혁법안
중 일부가 통과될
전망임

- (展望) 13개 금융개혁법안에서 미처리된 9개 법안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은 이번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입법화가 될 것으로 보임
 -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조성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
 - 반면, 금융감독체계의 통합이나 한은법 개정은 논란의 여지가 아직 많아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불가피함
 - 국내 중앙은행 제도와 감독 체제의 정비는 미시적인 금융 산업 및 금융 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임
- (追加 補完 課題)
 - 금융개혁상 3대 장애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

금융개혁 3대 장애
요인에 대한 대책
마련이 절실함

- 이 절실함
-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고용 문제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
 -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의 규제는 구조조정의 걸림돌로서 작용할 전망이다
 - 부실 채권 정리가 금융 부문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
- 금융개혁의 추가 보완과제
- (은행 소유한도규제의 완화)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은행에 다양한 소유구조를 허용해야 함
 - (금융지주회사의 조기 도입) 금융산업의 겸업화와 시너지효과를 위해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(금융기관의 진입규제 완화)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M&A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신규진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
 - (감독기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) 금통위·한은, 금융감독위원회, 재정원간의 협조체제 구축 필요
 - (적기시정조치의 조기 도입) 부실 금융기관의 조기정리 및 예방차원의 제도 마련

(김도균)